

재벌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쟁점 진단과 대응방안 검토

(재)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 이종인

I. 들어가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글로벌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대한 재력과 자본을 소유하는 자본가 내지 기업가 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재벌'에 관한 여러 문제들로 세상이 소란스럽다.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과 성장과실의 독식, 이에 더하여 연이은 총수 및 관계자들의 비리와 사회적 책임 회피, 공생발전 의지 미약 등의 문제들이 언론의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재벌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북을 두드리고 언론과 중소기업계, 시민단체와 학계 등 여러 분야에서 장단을 맞추는 형국이다. 정치권 중에서 여권은 “대기업들이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라 한다) 폐지를 악용했다”, “재벌 개혁 없이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는 반재벌 정서를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도 ‘정부여당의 재벌 감싸기’,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 등의 표현에서 보듯이 재벌 개혁을 정치공세의 단골 메뉴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대기업 주도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관점을 유지해온 보수 언론들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질타하고 있을 정도이다.¹⁾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카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한쪽에서는 상속증여세 부과 등의 과세와 연기금의 주주권을 강화하지는 방안을 내고 있고, 다른 정당에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문구를 당의 강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에는 10여 건의 대기업 규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지난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성장 혜택의 고른 확산’을 통해 재벌 문제의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 아래 본고에서는 재벌 내지 대기업에 관련된 최근 쟁점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

1) '보수정론지'를 표방해 온 조선일보에서조차 '자본주의 4.0' 기획기사를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으며, 동아일보(주간동아)에서도 작금의 재벌문제와 재벌정책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룬 바 있다(주간동아 제797호(2011.8.2), "아메바식 분화는 나의 힘? 대기업이 사는 법" 기사 참조).

한 해결방향에 대해 검토해 본다. 재벌 내지 대기업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본고의 검토 수단으로 활용해 보고자 한다.

II. 재벌 · 대기업에 관련된 최근의 쟁점 및 문제점 진단

재벌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쟁점은, 재벌이 경제력 집중을 통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을 제공해왔으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의 영역을 무분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점, 동반성장 내지 공생발전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회피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근래 수년 동안 경제력 집중이 극심해져 왔는데, 재벌이 이런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재벌의 계열회사 수가 2006년에 500여 개였었지만 2011년 4월 말에는 1,087개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국민소득(GDP)에서 차지하는 10대 재벌 계열사의 자산비중도 2008년에는 약 55% 내외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75.6%로 늘어났으며, 10대 재벌의 시가총액이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30대 재벌 소속 금융계열사 수가 2009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로 투자회사(PEF, SPC)와 보조기관의 형태로 증가했으며, 17개 그룹이 63개 금융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은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열사 수를 살펴보면 지난 4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증가 수가 큰 순서대로 보면, 포스코가 38개, 롯데 34개, SK 29개, LG 28개, GS 28개, LS 27개, 현대자동차 27개, 삼성 19개, 한진 15개, 현대중공업 14개 순이었다. 외형적으로는 과히 '재벌공화국' 이라고 부를 만하다.

둘째, 재벌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의 많은 영역을 빠르게 침투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이마트피자' 나 '통큰치킨' 의 골목상권 침범 논란뿐만 아니라, 파리바게트와 푸레쥬르 등의 중소규모 제빵점 점수²⁾와 기업형수퍼마켓(SSM)³⁾의 이른바 '지네발식' 영세상권 침투는 이미 과거지사가 됐다. 얼마 전에는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3세에 넘겨주기 위한 방편으로 MRO⁴⁾와 같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가 문제가 됐다. 그 외중에서 계열사간 부당한

2)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2,700여개의 매장을 보유한 국내 1위의 베이커리업체이며, CJ푸드빌의 푸레쥬르는 전국에 1,400여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상위 2번째 베이커리업체이다.

3) 지에스(GS)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 을 SSM(Super Supermarket)이라고 한다. 대개 연면적이 990~3,300㎡(300~1,000평) 규모이고,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점포를 내는 것이 쉬운 편이다. 가공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는 달리 채소나 생선류와 같은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4)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의 약자로, 공구나 문구류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를 구입해 납품하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최근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인들의 영역이 위축되고 있다.

내부거래로 승계자금을 확보했다는 의혹과 불법 증여와 탈세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최근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내지 영세 사업영역 확장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응답자의 84.0%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13.4%에 불과하였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65.0%)가 긍정적 평가(32.3%)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⁵⁾

셋째, 정부와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요청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이른바 ‘동반성장’ 이나 ‘공생발전’의 의지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이다.⁶⁾ 현재,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63.1%가 대기업들의 하도급업체 지위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 약 85.1%가 하도급위탁주문방식으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아래 적지 않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해가고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유통채널과정에서 손쉽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 대기업들의 1차 하도급업체와의 업무협력관계는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지만, 이를 들여다보면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업체 간의 관계는 여전히 수직적 거래관계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역시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응답자의 77.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는 17.6%에 불과하였다. 사실 지금과 같은 ‘갑을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관계로는 상생이나 공생발전이 거의 불가능하며, 선진경제로의 진입에도 애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넷째, 재벌들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회피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주민들이 몸살을 앓았던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불거진 재벌총수의 ‘흑자정리해고’ 문제와 모 대기업총수 자녀의 초호화 ‘황제결혼식’, 대기업 임원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⁷⁾ 등이 재벌에 관련된 논란을 비껴가지 못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필자의 견해와 비슷했다. 상술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0.4%가 “재벌·대기업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도덕적이라는 응답은 21.8%에 불과했다. 또한 “기부활동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6.9%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소에서 2011년 8월 23일에 전국의 성인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벌·대기업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6) 공생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생태계적 발전)은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로 제시한 사항 중 하나이다. 공생발전은 경쟁이 최우선시 되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복지지상주의와도 거리를 두자는 개념의 신조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공존공생하는 생태계적(Ecosystemic) 균형과 발전(Development)을 지향하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서울신문 2011년 8월 2일자 9면 참조. “대기업 임원 연봉 너무 높다”며, 이들의 연봉을 줄여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으로, 대기업 임원의 연봉이 사회적 쟁점화가 되었다.

Ⅲ. 재벌·대기업 문제의 해결방향과 대안 검토

1. 해결방향

국민들의 '재벌 바라보기'에는 경제적 식견과 인내력이 필요할 듯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앞서 소개했던 설문조사 결과, 재벌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상 외로 높았다. 대기업들의 계열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재벌총수의 경영권 편법승계를 강하게 질타했고,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 의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국가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재벌이나 대기업의 공헌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 재벌·대기업의 국가발전 기여도 〉

(단위 : %)

| 기여 | 매우 기여 | 기여하는 편 | 비기여 | 기여하지 못한 편 | 전혀 기여하지 못함 | 잘 모름 |
|------|-------|--------|------|-----------|------------|------|
| 69.5 | 19.4 | 50.1 | 27.3 | 21.0 | 6.3 | 3.2 |

〈 재벌·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

(단위 : %)

| 기여 | 매우 기여 | 기여하는 편 | 비기여 | 기여하지 못한 편 | 전혀 기여하지 못함 | 잘 모름 |
|------|-------|--------|------|-----------|------------|------|
| 52.6 | 9.8 | 42.8 | 44.6 | 33.8 | 10.8 | 2.8 |

특징적인 결과는,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의 목소리와 같이 강도 높은 (혁명적) 재벌 개혁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한국형 재벌경영구조에 부정적 평가가 69.0%로 매우 높았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75.1%)이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12.8%)는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의 재벌문제에 대한 대응 관점은 혁명적 변화보다는 현상 속에서의 혁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재벌 문제 해결방안(연령별) 〉

(단위 : %)

| |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 | 재벌을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 | 잘 모르겠음 |
|--------|-------------|---------------------|--------|
| 20대 | 9.4 | 73.7 | 16.9 |
| 30대 | 23.4 | 67.9 | 8.7 |
| 40대 | 13.8 | 75.2 | 11.0 |
| 50대 | 10.3 | 78.8 | 10.9 |
| 60대 이상 | 4.0 | 82.1 | 13.9 |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재벌문제의 해법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분명하다. '재벌체제 해체'와 같은 극단적 방향보다는 시장 중심의 발전적 재벌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 단, 감세나 고환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과 같은 정부의 이른바 '친기업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응방안 검토

이와 같은 재벌문제의 해결방향을 전제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⁸⁾

(1) 공생발전을 저해하는 재벌·대기업 행태 규제

재벌문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미 다양한 정책적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유통 등의 서비스 업종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다.

제조업 분야는 수입 자유화로 인해 사실상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이다. 다행히 최근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여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러한 방향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서비스 업종 일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 시키는 일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FTA와의 상충, 규제수위나 해당 품목 설정에 따른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등의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8)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필자의 독창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관련된 다양한 견해들을 수렴해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며, 적지 않은 고뇌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2)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대기업의 몸집 불리기 지배구조 개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의 몸집 불리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해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 순환출자의 악습고리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회 저변의 호응을 얻고 있다. 즉, 출총제 폐지가 경제력 집중 심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1987년에 처음 도입된 출총제는 그동안 제도 강화(1994년) → 폐지(1998년) → 부활(2001년) → 대폭 완화(2002년, 2004년) → 사실상 폐기(2007년)의 수순을 거쳐, 지난 2009년 완전히 폐기된 바 있다.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사실상 경제력 집중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질 자산 증가율과 계열사 수의 급증 사실이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⁹⁾ 반면에 출총제 폐지를 통한 투자 확대와 고용 증대 등의 성과가 관련 폐해보다 크다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¹⁰⁾ 다시 말해, 출총제의 부활이 글로벌 경쟁체제 아래에서 기업 활동을 일정부분 제약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총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며, 앞서 제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과세 강화 및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제41조를 보완하는 방안 등의 과세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¹¹⁾ 구체적으로는 주식가치나 영업권 증가분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다.¹²⁾ 또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통해 무소불위의 재벌행태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대책들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 따라서 상속증여세법 등 현행 세법 상으로 가능하다면, 과세를 통한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의 현행 법제의 틀 속에서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³⁾

9) 경제개혁연대 논평(2011. 3. 15)자료, 경제개혁연구소의 연구리포트(위평량·김우찬, 2011. 8. 29), 재벌개혁의 필요성 및 정책방안(김상조)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0) 특히 계계의 대표적인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과 시장경제 옹호를 주창하는 자유기업원 등은 출총제 폐지로 인한 투자 증가 효과가 매우 컸으며, 그로 인한 경제력 집중은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11)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와 과세방안'(2011. 7. 21. 자 조세일보 칼럼, 홍기용).

12) 이정의 민주노동당 대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의 발언이 있었다.

(4) 공생발전의 사회적 관행과 문화 정착

상술한 여러 방안들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상생의 사회적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모 재벌의 '협력업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같은 시장 중심의 동반성장문화 확산도 바람직하다. 또한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공동개발이나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등의 공동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면, 기술의 공동개발에 요구되는 자금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지원하거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홍보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일, 그리고 사회적 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일 것이다. 재벌총수나 대기업 CEO들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거나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5) 기존 법제도의 준수 및 엄정한 집행 유도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법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과 조세에 관련된 법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불법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나 부당한 기술·인력 탈취의 경우는 현행 공정거래법 등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이끌어내야 한다.¹³⁾

당사자인 해당 기업의 책임이 우선이겠지만, 법집행의 1차적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 및 사법부에 있다. '재벌가' 하면, 미결수 지장 현이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대마불사' 라는 말을 국민들이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취약해지는 전조라고 봐도 될 것이다.

13)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의 사회주의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 즉 정치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연기금 구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14) 기존의 법제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 징벌배상제도 도입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부분적 제한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부당한 시장행태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IV. 맺으며

여론의 못매와 정부의 압박 때문인지, 최근에 들어와서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 2차 내지 3차 협력사까지의 영향은 여전히 미약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이 어음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의 지탄 대상이 되었던 MRO 사업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있다.¹⁵⁾ 또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도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재벌총수의 올림픽 유치활동이나 거액 기부 발표, 모 재벌가 정치인의 사재 출연 등 최근 재벌의 사회적 책임 분담 움직임에 우호적인 여론도 없지 않다.

한편으로, 최근의 재벌·대기업 문제에 대응하는 정치권 주도의 규제정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성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실, 일부 정치권과 급진적 매체들이 경쟁상대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재벌문제를 악용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재계 간의 힘 겨루기로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염려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정권 말기에 큰 선거를 앞두고 재벌과 정치권이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말기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과 해외 도피 중이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구속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투옥되는 장면이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다. 당시에는 정부의 판정승으로 보였지만, 이후 재벌문제의 해소 추진에 있어서는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해 보이는 최근의 이른바 '재벌 개혁' 내지 동반성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나 재계의 시각은 어떨까? 한마디로 큰 선거를 앞둔 소리만 요란한 '정치적 제스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말 시점에서 정책당국의 개혁 추진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저 손을 놓는 것은 국민들이 부여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정부의 책무는 재벌문제 해결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핵심적인 개혁 포인트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진 국민들의 신뢰가 2012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효과적인 재벌문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재벌문제'이다.

15) 대기업 중 삼성이 제일 먼저 MRO 사업에서의 철수를 결정했고, 이어 SK는 계열 MRO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머니 투데이 2011. 8. 7. 자 인터넷 기사 참조).